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정읍·고창이 행복한 새로운 전북 그리다’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 정읍·고창

김관영 도지사, 도민 눈높이 맞는 설명·질의에 답변  
정읍시, 농생명산업지구·바이오특화단지 지정 건의  
고창군, 고창읍성 중심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지난 2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고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들의 인식 확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정읍시민, 고창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특별법 전부 개정안 경과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민보고, 정읍시·고창군의 주요 특례 발전전략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민보고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금강증

을 가졌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며 이해를 이끌었다. 또한 정읍시의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와 고창군의 해양수산산업 육성 조항 등의 사례를 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정읍시는 미래국가 전략사업이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사업인 바이오산업이 정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농생명산업지구 및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포함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보고회가 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상호 협력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김치 원료 최대 생산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 고창 김치 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로 제안했고, 고창읍성 중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과 ‘고창 석정 고풍친화지구’ 지정 특례를 제안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역사,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읍시·고창군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180만 도민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지난 2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고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 600여명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공단 측 해명대로라면 지역별 지부 운영할 필요 없다는 것

정부 공공기관 혁신정책,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혁신안

새로운 전북 시대 꿈꾸는 자치도민에 찬물 끼얹는 행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총 76개소 중 68%가량이 광주·전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전북자치도민들은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지역 내 우수 인력의 역의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 시대를 꿈꾸는 전북자치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3만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6,88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와 광주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퇴행적 혁신안인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정부는 후진적인 보수 혁신안을 내세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폐쇄하고 광주지부로 이전하겠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1월 광주·전북지부 행정통합을 완료한데 이어 4월부터 전북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 지부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 1월 강원지부를 강원·강원지부로 통합한 이후 4월에는 전북지부를 광주·전북지부로, 7월에는 대전지부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민들의 반발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지사와 광주지사 통합운영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날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계획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업무환경의 변화,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단 측 해명대로라면 공단의 지역별 지부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후진 혁신안이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호남권을

## 지역소멸 위기 극복... 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학교 공간·폐교 등에 체육관·주차장·도서관 등 조성

설명회 통해 우수사례 공유... 2027년까지 설치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군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행정실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또는 폐교 등에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고, 서울대 건축학과 최순



지난 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학교복합시설 설명회가 열렸다.

섭 박사(한국교통대 교수)가 학교복합시설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

으로 찾아가는 지역별 컨설팅, 우수사례 탐방 등을 통해 지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시군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변산문화센터를 전북 제1호 학교복합시설로 선정,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110억 중 55억의 교육부 예산을 확보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모든 시군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돼 학생의 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2024년 되세요!**

익산시의회